새로운 시대의 복지사회를 열며

朴 純 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21세기 들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계미년 새해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여러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정보화는 국민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경제·사회·정치는 물론 가족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계속 우리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는 시민적 의식의 물결이 요동치고 있어, 이러한 국가에너지가 충분히 발휘되고 국가 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면에 한민족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적 요인들이 돌출하고 있는 등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틀을 급속하게 구축하여 왔다면 향후 5년간은 경제성장과 분배를 균형화하여 경제·사회발전을 내실화하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야 하는 중차대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을 돌이켜보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함께 '생산적 복지'를 3대

국정이념의 하나로 내세우면서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복지 확대에 주력하였습니다. 사회보험은 전국민 사회보험제도로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생활보호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면 개편하고, 의료급여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그 어느 때 보다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통합을 통하여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제고하였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운영에 가입자가 대표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성을 제고하였으며, 사회복지인력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 여성,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약분업제도를 도입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질병의 조기발견을 통하여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이 1997년 6조원에서 2002년에 12조원을 상회하여 2배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복지지출은 OECD 기준으로 GDP 대비 6.5%에서 현재 10%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경제위기 때에 비하여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소득격차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에서 불안정한 취업에 놓여있는 비정규 근로자가 크게 늘었으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취업난도 여전합니다. 이들 계층의 빈곤화가 중산층의 경제력을 쇠퇴시키고 빈부격차를 벌이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경제·사회적 급변은 가족 및 사회의 안정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노인가구의 증대, 이혼율의 급증, 출산율 급락 등 가족 및 사회구조를 취약화 할 새로운 움직임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 신정부의 참여복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주류가 중산층이 되어 더불어 잘사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며, 국민들이 참여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해 가는 목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산적 복지는 시간적 제약, 예산상 제약, 그리고 제도의 미흡 등으로 아직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취약 극빈층을 제외하면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가구들은 어느 정도 근로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지수급뿐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생산이나 사회적 생산성을 수반하는 사업들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경제·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뿐 아니라 민간도 적극 나서서 온 국민이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정부의 '참여복지'와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정부의 참여복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주류가 중산층이 되어 더불어 잘사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며, 국민들이 참여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해 가는 목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복지수준을 극빈층으로 제한된 기본적 생활보장에서 서민들의 기본적 생활보장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복지지출 규모를 GDP 대비 10~15%대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여성의 건강과 아동의 보육을 책임지는 복지제도를 마련하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와 응급의료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실천에서 가족과 사회는 물론 개개인이 정책의 결정, 실천 및 평가에서 모두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밝고 투명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참여복지'에 제시된 복지제도를 모두 실현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OECD 기준에 의하면, GDP 대비 복지재원의 15%는 이미 미국과 일본의 1990년대 말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 국가가 복지 지체국으로 평가 절하되는 이유는 보편적 급여의 성격이 큰 사회보험에의 의존율은 높은 데 반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데는 매우 미흡한 데 기인합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5개년 계획 수립시 단계적으로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지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빈부격차 축소와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은 복지제도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민 중산층을 위한 물가안정이나 고용, 의료, 교육과 주택정책 등에서 획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확충과 재분배 정책을 통한 사회안정이 경제성장을 떠받치는 기반이 되어 경제와 복지가 상생하여 국가발전의 도약의 토대가 되어야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특히 여성, 준 고령자, 청년들이 복지 수급자로만 남아서는 우리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세계적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경제·사회적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복지사회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여 월드컵 신화를 창조하였듯이, 빈부의 차이나 세대의 차이, 노사간 대립을 넘어 온 국민이 서로 나누는 것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열린 세계, 정보화사회, 고령화 등 새로운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가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창조가 필요할 것입니다.